

# 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lee@kiep.go.kr, Tel: 044-414-1134)



## 차 례

1. 서론
2. 태국 총선 분석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19년 3월 24일 태국은 약 5년간의 군부 집권 기간을 마치고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함.
  - 이번 총선은 親군부·親탁신 경쟁 구도하에 진행되었으며, 親탁신 진영은 탁신 前총리에 대한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親군부 진영은 군부 집권연장을 추진하는 신생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lang Pracharat Party)이 주도함.
- ▶ 이번 총선에서 親군부·親탁신 진영 모두 상하원 합계 376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태국 신정부 구성은 주요 정당들의 연정 구성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상하원 700석(상원 250석, 하원 500석)의 과반수인 376석을 확보해야 하며, 상원 250석을 선점한 親군부 팔랑쁘라차랏당은 126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정권 연장이 가능한 반면 親탁신 진영은 하원에서만 376석을 확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에서 총선을 치름.
  - 親군부 팔랑쁘라차랏당이 상하원 과반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태국이 추진해온 기존 주요 경제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하원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국왕 대관식(5월 4~6일) 이전에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태국은 2019년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의 의장국으로, 한·아세안 교류 협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태국 신정부 구성 및 정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 서론

■ 2019년 3월 24일 태국은 약 5년간의 군부 집권 기간을 마치고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했으며, 동 선거에서 親탁신(Thaksin)계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하원 지역구 선거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의석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現군부 정권의 집권 연장 가능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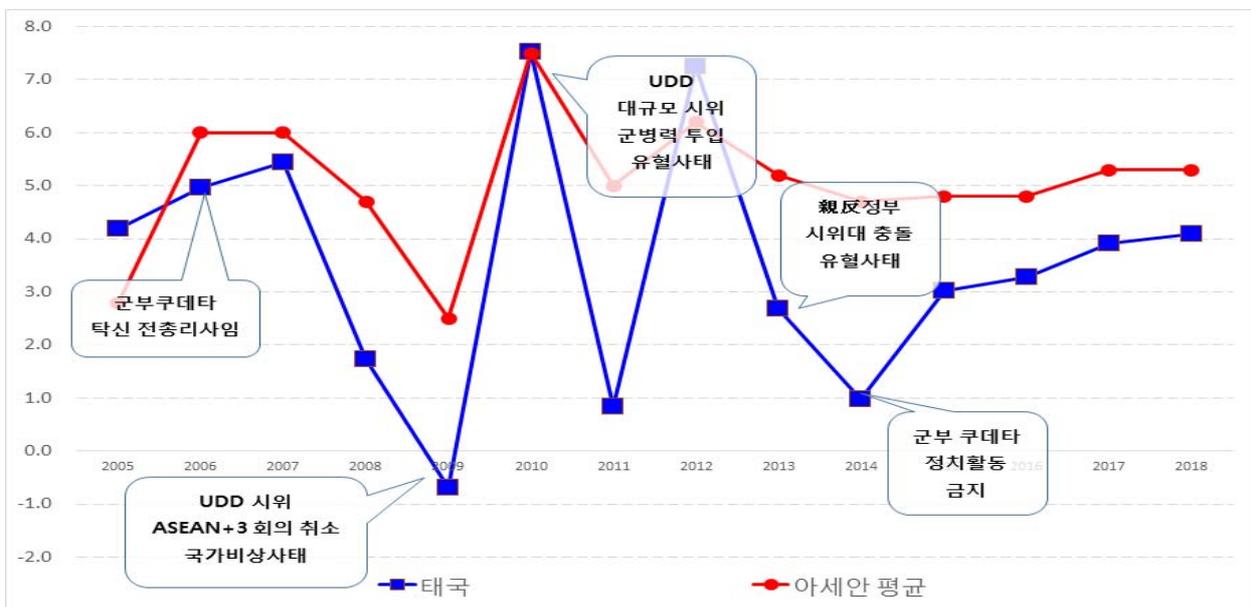
- 태국은 2006년 9월 탁신 前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사임한 이후 親-反 탁신 세력간 정쟁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군부 쿠데타 등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옴.
- 브라우트 찬오차(Prayut Chan-O-Cha) 現총리는 2014년 5월 쿠데타를 단행한 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은 2016년 실시된 국민투표로 개정된 헌법에 근거해 시행됨.
- 금번 총선 결과 親탁신 진영이 정권 창출을 위한 상하원 합계 과반수인 376석 확보에 실패해 現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前총리가 사임한 후 親-反 탁신 세력간의 갈등으로 수차례 정권이 교체되고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사회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옴.

- 2006년 탁신 前총리 사임 후 태국은 親-反 정부 단체의 대규모 시위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정정불안이 지속됨.
- 이와 같은 정정불안으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일부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러옴.

그림 1. 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05~18년)

(단위: %)



자료: 국제통화기금(www.imf.org).

- 2001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온 親탁신 계열이 상하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다수 정당들이 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총선 결과 분석을 통해 태국 정치 구도의 변화와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하기로 함.

## 2. 태국 총선 분석

### 가. 태국 정치 현황

- 태국은 2006년 탁신 前총리 사임 이후 親-反 탁신 계열간 갈등으로 정정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2014년 쿠데타 이후 모든 정치·정당 활동이 금지되고 개헌을 통한 총선 실시와 민정 이양 논의가 지속되어옴.
  -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인한 탁신 前총리 사임 후에도 親탁신 정당이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선거법,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親-反 탁신 단체간 갈등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국가비상사태 등 정정불안이 지속됨.
  - 2014년 5월 쿠데타 발생 후 정치·정당 활동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모든 주요 정치 사안을 결정해왔음.
  - 2014년 군부정권 수립 직후부터 총선을 통한 민정이양 논의는 지속되어왔으나 선대 국왕 서거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총선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군부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에 총선을 실시함.

#### 태국의 주요 정치 이슈(2006~19년 3월)

2006. 9	18번째 군부 쿠데타 발생, 탁신 총리 사임
2006. 10	수랏 총리 임명, 과도내각 수립
2007. 12	총선 실시, 親탁신계 PPP(People's Power Party) 정권 재창출, 사막 총리 취임
2008. 9	공직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사막 총리 사임, 솜차이 부총채 총리 취임
2008. 12	2007년 총선 불법선거 혐의 PPP 해산, 민주당 아피싯 36대 총리 취임
2009. 4	親탁신 UDD 대규모 반정부 시위, 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담 취소, 국가비상사태 발령
2010. 5	親탁신 단체 UDD 방콕 도심 시위, 군 병력 투입 진압,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
2011. 7	조기 총선 실시, 親탁신 프어타이당 승리, 잉락 총리 취임
2013. 12	사면법 입안으로 반정부 시위 심화,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충돌로 유혈사태 발생
2014. 5	19번째 군부 쿠데타 발생, 브라웃 총리 취임, 정치·정당 활동 금지
2016. 8	헌법 개정, 군정기구 NCPO 상원 250석 임명권 확보
2019. 3	총선 실시, 親탁신계 상하원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군정 연장 예상

- **親탁신 진영은 2006년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사임한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反군부 진영을 주도함.**
  - 탁신 前총리는 2001~06년 임기 동안 다수 인기영합적 정책을 통해 서민층의 높은 지지를 확보했으며, 특히 고향인 동북부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높음.
  - 탁신 前총리의 親서민 이미지에 힘입어 2011년에는 여동생인 잉락 前총리가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직에 당선됨.
  - 탁신·잉락 두 전직 총리 모두 親서민·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각각 2006년,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사임하고 부패 혐의로 기소된 후 해외 도피 중임.
  - 하지만 親탁신계 정당인 프어타이당에 대한 서민층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으며, 특히 유권자수가 많은 북부 및 동북부 지역에서의 지지는 압도적임.
  
- **反탁신 진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現군부 정권의 집권 연장을 위해 親탁신 진영과 대결구도를 형성함.**
  - 민주당은 2008년 12월 親탁신 정당 PPP(People's Power Party)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산되자 2010년까지 집권한 바 있으나, 집권 기간 내내 親탁신 단체 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정정불안이 지속됨.
  - 親군부 보수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은 2018년 8월 창당되었으며 당내 증진 다수가 親탁신 정당 출신 혹은 탁신 정권 내각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일부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포함됨.

표 1. 태국 총선 주요 정당 비교

정당	프어타이당	민주당(보수당)	팔랑쁘라차랏당
진영	親탁신	反탁신, 보수	親군부, 反탁신
총리후보	쿤잉 수다랏(57)	아피싯 웨짜짜와(54)	쁘라웃 찬오차(64)
주요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가격 30% 인상</li> <li>· 쌀 보조금 5,000Bt/Ton</li> <li>· 군부정권 주요 정책 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소득(연간 12만 바트)</li> <li>· 아동고령 수당 1,000Bt/월</li> <li>·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30% 인상</li> <li>· 빈곤층 사회복지카드 발급</li> <li>· 지역 특화 경제특구 건설</li> <li>· 인프라 건설로 경기 부양</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지역, 서민층 지지</li> <li>· 레드셔츠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11 집권</li> <li>· 수도권·남부지지</li> <li>· 옐로우셔츠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쿠데타 주도</li> <li>· 탁신계·민주당 인사 다수 영입</li> </ul>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 2016년 개정 헌법 총선 제도

- 태국 의회는 2016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상원 250석, 하원 50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총선은 하원 선출을 위한 것으로 하원 500석은 지역구 350석, 비례대표 150석으로 구성됨.
  - 하원 500석은 기존 지역구 400석, 비례대표 100석에서 지역구 350석, 비례대표 150석으로 변화했으며,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소수의 의석을 배분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에 비해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해짐.
  - 2016년 개정 헌법에 의해 상원은 기존 200석에서 250석으로 확대되었으며 군정 회의체인 국가평화안정회의(NCPO)가 상원 250석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독점함.
    - 상원 250석 중 6석은 육해공군 사령관 등 군부 인사, 194명은 국가평화안정회의 상원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400명 후보 중에서 임명, 나머지 50석은 선관위 추천 후보 200명 중에서 국가평화안정회의에서 임명해 사실상 상원은 군부가 독점하는 구조가 마련됨.
  - 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하원 500명에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한 후 지역구 의석을 빼는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親탁신계 프어타이당이 비례대표 확보에 불리한 구조임.
- 상원 250명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한 現군부 정권이 총리 선출을 위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지난 2월 주요 親탁신계 정당의 해산으로 인해 親탁신계 정당의 득표 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총선을 실시함.
  - 차기 정권 창출에는 상원 250석, 하원 500석(지역구 350석, 비례대표 150석) 합계 과반수인 376석을 필요로 함.
  - 군부는 2016년 개정 헌법을 통해 민정 이양 시 5년간 상원 250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군부 의회체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가 행사하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
  - 반면 親탁신계는 하원 500석 중 376석을 확보해야 정권창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정권창출에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왕실을 선거에 개입시켰다는 혐의로 주요 親탁신계 정당인 타이락사찰당(Thai Raksachart Party)이 해산되면서 득표 기반이 크게 위축됨.
    - 親탁신 계열의 대표 정당인 프어타이당은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구 후보를 줄이는 대신 다수의 중소규모 親탁신·反군부 자매 정당 후보들이 입후보하는 전략을 준비함.
    - 2월 親탁신 정당 타이락사찰당이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총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왕실을 정치에 활용했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당 지도부의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및 정당 해산 판결이 내려져 親탁신계 정당의 연합 전략에 적신호가 켜짐.

## 다. 총선 결과 분석

- 3월 24일 총선 결과 지역구 1위는 親탁신계 프어타이당이, 2위는 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차지했으나 親군부· 親탁신 진영 모두 정권창출을 위한 상하원 합계 376석 이상의 의석 확보는 실패함.
- 이번 총선 하원선거 지역구 350석 중 137석을 親탁신계 프어타이당이 확보해 지역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97석으로 2위를 차지함.
- 프어타이당, 팔랑쁘라차랏당과 함께 총선 대표 경쟁 주자로 인식되어오던 민주당은 10% 수준의 득표율로 참패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피싯 민주당 대표가 사임함.
- 반면 신생정당인 퓨처포워드당은 지역구 의석은 5위이나 기성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총선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비례대표 득표결과를 합할 경우 3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태국 총선 주요 정당별 득표 내역

정당	비례대표		의석		
	득표	비중	지역구	비례대표	총계
프어타이당*	7,920,630	22.3	137	0	137
팔랑쁘라차랏당	8,433,137	23.7	97	21	118
퓨처포워드당*	6,265,950	17.6	30	57	87
민주당	3,947,726	11.1	33	21	54
폼짜이타이당	3,732,883	10.5	39	13	52
태국자유당*	826,530	2.3	0	11	11
챗타이팻타나당	782,031	2.2	6	5	11
쁘라차랏당*	485,436	1.4	6	0	6
뉴이코노믹스당*	485,664	1.4	0	6	6
프어차당*	419,393	1.2	0	5	5
태국행동연합	416,324	1.2	1	4	5
차팻타나당	252,044	0.7	1	2	3
기타	1,564,899	4.4	0	18	18
총계	35,532,647	100.0	350	150	500

주: \* 반군부·민주화 전선 참여 정당, 비공식 발표 자료로 비례대표 의석은 추정치임.  
자료: 태국 선관위 및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총선 후 반군부 진영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부적절한 운영형태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5%가 넘는 무효표 처리, 일부 재외국민 투표지 도착 지연으로 인한 무효 처리 등 태국 선관위의 선거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번 총선에 읍져버로 참여한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안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또한 일부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임.<sup>1)</sup>
-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한 점도 부정선거 의혹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일

부 반군부 정당은 부실 관리를 강력히 항의하며 전체 투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금번 선거 결과에 대해 탁신 前총리도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며,<sup>2)</sup>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 및 반군부 정당인 퓨처포워드당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법적인 해소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태국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2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6개 선거구에서 재투표를 시행함.
- 태국은 지난 수차례의 총선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극심한 정정불안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 금번 총선의 공식적인 최종 개표 결과는 국왕 대관식인 5월 4~6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그 동안 親탁신·親군부 진영의 연정 구성 경쟁이 예상됨.

- 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의 경우 단독으로도 하원 118석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수 의석만 추가하면 정권 연장을 위한 126석 확보가 가능함.
- 반면 親군부 프어타이당은 총선 후 6개 정당과 연합해 자체 추산 하원 255석 규모의 반반군부 연정 체제를 구성했으나,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반군부 연정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폼짜이타이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의 연정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3. 전망 및 시사점

■ 금번 총선으로 親군부, 親탁신 어느 진영도 상하원 과반수 376석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태국 신정부 구성은 주요 정당들의 연정 구성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親탁신 진영은 총선 직후 7개 정당 연합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연정체제 구축에 나섰으며, 상대적으로 상하원 과반수 의석 확보가 유리한 친군부 팔랑쁘라차랏당은 구체적인 연정 구성방향에 대해 밝힌 바 없으나 4월 중에는 연정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 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되지 못했으나 군부가 확보한 상원 250명 임명권을 이미 선점하고 있고 단독으로도 하원에서 11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親탁신 진영에 비해서 연정을 통한 정권창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임.

- 차기 정권 창출에는 상하원 합계 과반수인 376석이 소요되나 상원 250명을 親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모두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하원 126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反탁신 정서가 큰 민주당과

1) The Guidian(2019), "Thai election process 'deeply flawed' say independent observers." (March 26)

2) Thaksin S.(2019), "Thaksin Shinawatra: The Election in Thailand was rigged." *New York Times*. (March. 25)

연정을 구성할 경우 무난히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바 없으나 과거 집권 시절 親탁신 세력과 갈등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親군부 연정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태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보수정당이 親군부화 된다는 비판을 우려해 중도 야당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음.

■ 親탁신 프어타이당 중심의 7당 연합체 민주전선(Democrat Front)은 총선 직후 연정체제를 통해 신정부 구성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추가 영입을 위한 협상에 나섬.

- 총선 직후 7개 정당 연합체로 출범한 민주전선의 의석수는 255석에 그치고 있으며, 이번 총선 지역구 의석 3위인 품짜이타이당은 아직 연정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아 향후 연정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일각에서는 민주전선 진영의 리더인 프어타이당이 총리 후보직을 품짜이타이당에 양보하는 형태로 反군부 진영의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논란이 향후 대규모 시위 및 유혈사태로 확대될 경우 과거 수년 전과 같은 정정불안이 재발할 우려도 제기됨.

-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관위의 부적절한 선거 운영에 대한 온라인 탄핵 청원이 83만 명을 넘는 등 불법·부정선거 관련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콕 도심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도 시작됨.<sup>3)</sup>
- 태국은 과거 수차례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정불안이 심화되거나 심지어 정권이 교체된 사례도 있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또한 정정불안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국왕 대관식이 5월 4~6일 개최 예정임을 감안하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규모 시위는 공식적인 선거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5월 9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공개된 총선 결과를 감안하면 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군부 정권이 추진해온 주요 경제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하원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기존 주요 정책들에 대한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됨.

- 태국은 잦은 정권 교체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親탁신계 프어타이당은 現군부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 시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공언해왔음.
-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現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군부 정권이 추진해온

3) Strait Times(2019), "Protest in Bangkok over election results." (April 1)

주요 경제정책은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sup>4)</sup>

- 하지만 親탁신계 프어타이당이 주도하는 反군부 민주전선이 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군부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하원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 정권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3. 태국 現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

분야	주요 정책 방향
거시경제	성장 중시, 연평균 5~6% 성장 목표
산업	스마트·바이오(New S-Curve) 신성장동력 마련
인프라	수퍼 클러스터*, 동부경제회랑(EEC) 및 경제특구 건설
무역	수출확대, 국제무역센터 유치
복지	농가·저소득층 지원

주: \* 제조, R&D, 지원기관을 집적시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성장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  
자료: 저자 작성.

■ 태국은 올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의 의장국으로 한·아세안 교류 협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태국 신정부 구성 및 정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아세안정상회의, 아세안+3, 아세안+6,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다수의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만일 총선 및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쟁으로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에 문제가 발생할 시 국가신인도 타격이 우려됨.
- o 태국이 2009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당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상회의가 취소되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극심한 정정불안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향후 5월 태국 신정부 구성 및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아세안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수의 다자간 회의는 물론 한태·양자 협력을 위한 제2차 한·태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관련 협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EP**

4) Bangkok Post(2019), "Post-poll policy: Dynamic continuity." (March 26)